

W:WOOSUNG

2024년 9월

#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9월 1주차 HOT ISSUE

- 내년 축산·방역분야 예산 2조3천여억
- 8/31 경기 이천시 젖소농장 럼피스킨(LSD) 발생
- 8/31 김포서 ASF 의심축 신고, 양성 판정

## 내년 축산·방역분야 예산 2조3천여억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2%(4천104억원) 증가한 규모다.

축산분야 총예산도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축산분야(방역 예산 포함)는 농식품부 전체 예산 중 약 12%에 해당하는 2조3천여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이중 축산국의 예산은 올해 1조659억8천 여만원 대비 11% 증가한 1조9천815억원 수준. 이중 축발기금은 9천여억원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방역국의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3천194여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속 지원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천387억원의 상환 1년 유예 등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신규사업 등은 근시일내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예산안 편성과 관련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축산환경컨설턴트, 지속가능한 청정축산 이끈다

“농가 혼자 가축 사양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탄소·축산냄새 저감 기술을 공부하는 게 힘에 부치거든요. 그런데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증을 가진 분이 도와주니 든든합니다.”

최근 진재권 전북도 동물방역과 주무관(수의사)이 정읍지역 한 양돈농가에게서 들은 말이다. 진 주무관은 2021년 축산환경컨설턴트 3급, 이듬해 2급을 취득해 현재 가축분뇨 업무를 전담한다.

그는 “해당 양돈농가에게 축산냄새 저감 방법과 퇴액비화 기술 등을 교육했는데 농가가 저를 믿고 따라와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축산환경컨설턴트라는 명찰을 패용하고 농장을 방문하면 농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관련 정보에 귀를 기울여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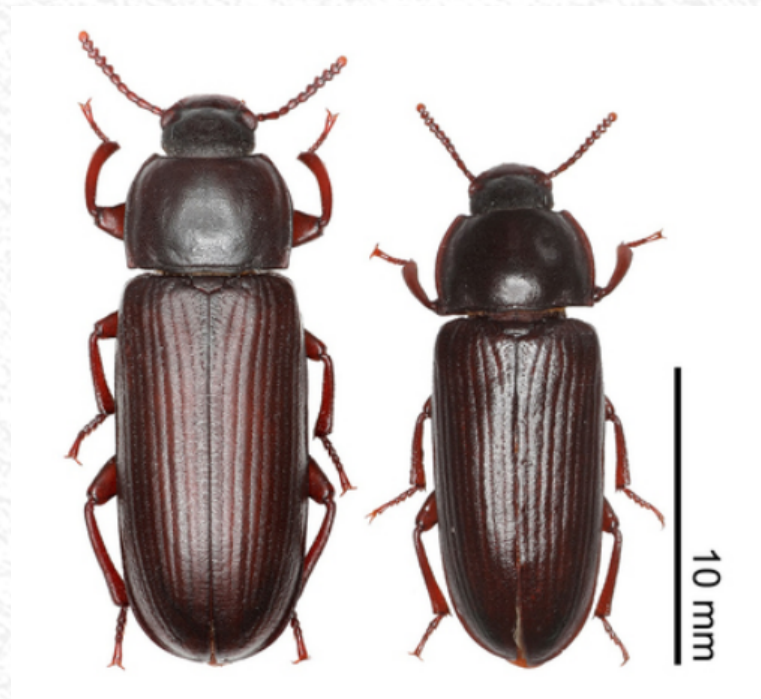
정부는 2017~2020년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발급하던 방식에서 2021년 자격시험으로 전환했다. 시험 과목은 ▲축산환경정책과 법규 ▲축산환경오염방지론 ▲가축분뇨 처리기술론 ▲축산악취방지론 등 크게 4가지로, 기사·산업기사 수준의 난이도를 보인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 ▲퇴액비화 기준 준수 ▲퇴액비 살포장비·측정기기 운영·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 발급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의 문홍길 원장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축산환경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2·3급 자격시험 신청기간은 이달 16~30일이고, 필기시험 일정은 9월7일이다.



## 식용곤충 ‘처음고소애’ 사육농가에 10월부터 보급



[왼쪽] 처음고소애 [오른쪽] 고소애

정부가 식용 곤충 ‘고소애’의 신제품인 ‘처음고소애’를 선발하고 10월1일부터 우량 종충(곤충 종자) 보급 신청을 받는다.

농촌진흥청은 식용 곤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충북도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함께 ‘처음고소애’를 선발·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애’는 단백질·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비타민·무기질 함량이 높은 식용 곤충이다. 풍미가 고소해 다양한 식품에 활용하기 좋고 식품 원료로도 승인됐다.

‘처음고소애’는 지난해 12월 농진청 직무육성 신제품 선정위원회에서 ‘고소애’의 첫 신제품으로 공식 선정됐다. 농진청에 따르면 ‘처음고소애’는 11주 동안 키웠을 때 ‘고소애’보다 성장 속도가 1.2배 빠르고 증체량도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10월1일부터 종충 보급 신청을 받아 두차례 증식을 거쳐 농가당 1kg씩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변영웅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양잠산업과장은 “‘처음고소애’는 경제성이 뛰어난 품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 이천시 젖소농장 럼피스킨(LSD) 발생... 추가 확산 차단 총력



경기도 이천의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LSD)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어제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오늘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의 농장주가 어제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결절을 확인하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했으며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지난달 12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또 이천시와 인접한 3개 시·군(여주·광주·충주)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인접 지역 중 올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광주시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오는 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돼지고기서 낭미충? 89년 이후 국내서 사라져

한돈협회가 최근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된 돼지고기와 낭미충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덜 익힌 삼겹살 섭취로 인한 낭미충 감염 우려는 현재 국내 상황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거 없는 보도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돈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전문가들은 1989년 이후 국내산 돼지고기에서 낭미충(갈고리촌충의 유충)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한기생충학회 논문에서도 1971년까지만 해도 1.9%에서 발견된 이 기생충이 2004년 아예 사라졌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는 1980년대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한돈농가에서 사료 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낭미충 감염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의 경우, 멕시코, 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낭미충이 발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낭미충 유행지에서 돼지를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검역 과정에서 낭미충은 크기가 커서 쉽게 발견될 수 있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점을 협회는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낭미충 환자는 대부분 10-20년 전에 감염된 경우로, 뇌로 간 낭미충이 오랜 기간 증상 없이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낭미충 환자 발생은 최근에 먹은 돼지고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 3일간 120두 폐사.... 김포서 ASF 의심축 신고, 양성 판정

경기도 김포시에서 양돈장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김포시 소재 3천900두 사육규모의 양돈장에서 지난 30일 오후 2시30분경 돼지폐사와 발열, 사료섭취 등 ASF 의심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농장에서는 지난 29일부터 육성돈 구간에서 하루 평균 40두씩 3일간 120두의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km 방역대내에는 13농가(500~3km 5농가 6천825두, 3~10km 8농가 2만3천465두)에서 3만317두가 사육되고 있다.

경기도 김포의 양돈장 ASF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 “방역지침 따르다 농가 피해 막심” ‘동물복지 달걀’ 어떡하나(1)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 정부 지침에 따라 외부 방목을 하지 않은 동물복지 산란계농장들이 달걀껍데기(난각) 사육환경 표시 번호 ‘1’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자들은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 중 난각에 번호 1을 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유통업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2월 한달간 일부 대형마트에선 껍데기에 1이 찍힌 달걀 유통이 전면 중단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자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용한다. 해당 기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3항에 근거해 방목(또는 방사)을 제한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AI는 2003년 12월 처음 발생한 이후 거의 매년 나타난다. 1년 중 5개월간 사실상 방목이 금지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방목이 제한되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산란계농장이라 하더라도 난각에 1을 표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고시(‘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난각 사육환경 번호 1은 사육환경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산란계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방사 사육’일 때 표시할 수 있다. 2는 사육환경이 ‘축사 내 평사’를 갖췄을 때 표시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방역기간 방사 사육을 하지 않는다면 난각에 1을 표시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며 밝혔다.



## “방역지침 따르다 농가 피해 막심” ‘동물복지 달걀’ 어떡하나(2)

산란계농가들은 식약처의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사육환경 번호 1은 농장에서 닭을 사육하는 환경이 방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 표시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방사 사육 여부는 사육환경 표시 번호와 무관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식약처와 농식품부 간 법령 해석이 충돌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운용하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를 통해 산란계농장의 실외 방목장 운영 기준을 규정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특별방역기간엔 실외 방목장을 갖춘 농장이 방목장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경남 산청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한 산란계농가는 “식약처 판단대로라면 농식품부에서 자유방목 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달걀을 판매할 때 1이 아닌 2를 표시해야 한다”며 “자유방목 농장 인증과 난각 표시 2(축사 내 평사에서 사육)를 동시에 표시하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식약처 측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선 이같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특별방역기간 개시는 한달가량 남았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선 법적 분쟁을 우려해 ‘난각 표시 1 달걀’을 아예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 투자를 해온 동물복지 농가 입장에서 판로를 잃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무리한 법령 해석을 고수한다면 행정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농식품부와 식약처 두 부처가 협의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